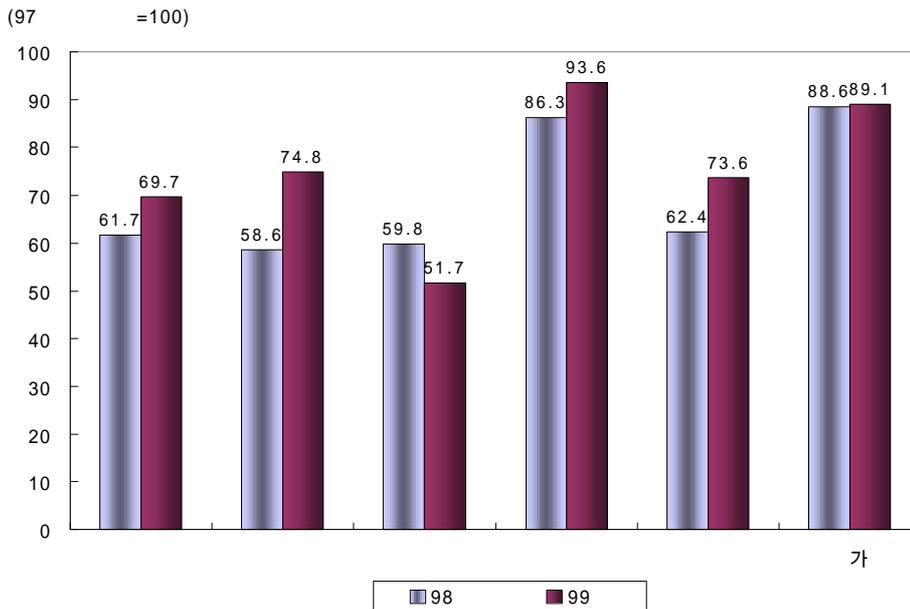


###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한 주요 경제 지표

전 민 규

- (주요 내용) 재정경제부는 99년 상반기의 주요 경제 지표를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상반기의 지표들과 비교한 「경제 활동 수준 비교」 자료를 발표하였음
- 이 자료는 국민계정, 산업생산, 대외거래, 물가 및 부동산, 고용 등의 32개 항목에 걸쳐 비교하였으며, 이중 가용외환보유액과 대외채권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외 대부분의 지표들은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
- 소폭 개선된 것으로는 GDP(0.9%), 산업생산(6.7%), 출하지수(9.3%) 등 3개에 불과하였으며, 수출은 7월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1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

< 외환위기 이후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 >



- (시사점) 경기 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님
-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전의 2.7배에 달하고 6월 현재 가동률도 79.8%로 97년 2/4분기의 80.1%에 비해 다소 여유도 있어 과열 우려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 (mkjun@hri.co.kr ☎ 724-4015)

---

## 증권 '3부 시장' 및 空賣渡 도입

임진국

### ● 주요 내용

- (증권 3부 시장 도입) 비상장·코스닥 비등록 기업의 주식 및 채권이 빠르면 금년중에 코스닥 증권시장에 설치되는 呼價 중개 시스템을 통해 거래될 예정임
  - (공매도 허용) 이와 함께 증권사, 은행, 증권사는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증권 매매 결제도 종전의 당일 결제에서 다음날이나 계약일로부터 영업일수 3일째 되는 날까지 허용
  - 개인도 보유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증권사에 팔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음
  -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위해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임
- (거래 방식) 증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호가 중개 시스템에 매도주문이나 매수주문을 올려놓게 되며 실제 계약체결은 증권사간 협의에 의해 이뤄짐
  - 호가 중개 시스템에는 위탁 증권사가 매도 및 매수 호가를 공시만 하고, 실제 매매 체결은 증권사들간 정보 교환을 통해 물량과 가격을 개별 결정
- (거래 요건) 대상 주식은 외부 감사에서 적정 혹은 한정 의견을 받고 증권예탁원 예탁과 명의개서 대행 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함
  - 사모 발행 주식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후 호가 중개 매매 대상으로 지정 가능

### ● 평가

- (기대 효과) 증권시장내의 유동성이 높아짐으로써 시장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, 현물 매도·선물 매입의 베이스 거래나 현물간의 재정 거래(arbitrage)가 용이하게 되어 가격 형성의 효율화가 나타날 것임
- (보완 과제)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헤지펀드가 주식·통화의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, 금융 당국은 방어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임
  - 채권의 경우 발행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유통시장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, 발행 종류의 통합화·단순화가 시급함

(jklm@hri.co.kr ☎ 724-4018)

## 최근 주요 정책(1999. 8. 2 ~ 8. 8)

<p>「유가증권의 장외 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」 의결</p>	<p>금융감독위원회 (8.6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'제3의 주식시장'을 99년 내에 개설할 방침</li> <li>- 코스닥시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는 대로 코스닥시장 내에 설치할 예정</li> <li>- 거래 대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함</li> </ul>
<p>「재정관리 제도 혁신 방안」 발표</p>	<p>재정경제부 (8.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 방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재정의 효율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 체제를 구축</li> <li>· 국가 재정에 경영 이념 및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정부 생산성 향상 도모</li> </ul> </li> <li>- 주요 세부 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자 납부제도 도입 등 재정의 정보화</li> <li>· 국가 재정 전체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작성</li> <li>· 複式簿記/發生主義會計 전면 도입</li> <li>· 국가의 채권/채무의 인식 및 보고 범위와 평가 기준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
<p>고유 업무 이외의 금융기관간 업무 제휴 허용</p>	<p>금융감독원 (8.8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 금융권역별로 핵심 업무를 구분해 非핵심 업무에 대한 금융기관간 제휴를 허용할 방침</li> <li>- 이는 금융기관간의 업무 융합과 겸업의 초기 단계라는 의미를 가짐</li> <li>- 현재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의 핵심 업무를 설정하고 있으며,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제휴를 허용할 방침</li> </ul>

## 주요 정책 정보(1999. 8. 9 ~ 8. 15)

<p>8.9 (월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산업자원부)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</li> <li>- 대규모 점포에 대한 시설, 운영, 분양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업주의 자율적인 결정권 확대</li> <li>- 신규 유통업체의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한 '일괄 의제처리'의 대상 확대</li> </ul>
<p>8.15 (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민·중산층 대책 프로그램 발표</li> <li>- 지난 6월에 발표된 「중산층 및 서민 생활 안전 대책」은 IMF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단기적인 것이었으나, 금번에 발표 예정인 것은 '생산적 복지'를 위한 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음</li> <li>- 그간에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빈곤층의 생활 보장을 위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정 여부와 시행 시기</li> <li>· 훈련과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의 확대</li> <li>· 벤처기업, 문화관광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</li> <li>·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효율화 방안</li> <li>· 과세특례, 간이과세 등을 축소하고 상속제도의 개편을 통해 고액 고소득자의 부담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